



판결로 확인하는 사건의 결과

# 해고 분쟁 중 지급한 임금상당액, 판정이 뒤집힌 뒤 반환까지 구하다.

## 임금상당액 원금 전액 인용

반환금 인용

두 상대방 합계 37,812,430원 및 지연손해금

### 광 주 지 방 법 원

### 판 결

사 건 부당이득금  
원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율

피 고

변 론 종 결 2024. 5. 8.

판 결 선 고 2024. 5. 22.

### 주 문

1. 피고 은 원고에게 17,528,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은 원고에게 20,283,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 구 취 지

자연손해금의 기산일 외에는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2015. 11. 20.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골프장 코스관리 및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피고           은 2019. 11. 4., 피고           은 2019. 12. 15. 각 해고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2020. 1. 14.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판정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2020. 4. 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여 인용 판정을 받은 사실, 원고는 피고들에게 해고일부터 원직복직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사실[피고           에게는 총 17,528,470원(임금액은 20,528,470원이나 해고예고수당 3,000,000원은 제외), 피고           에게는 총 20,283,960원(임금액은 23,200,650원이나 해고예고수당 2,916,690원은 제외)을 각 지급],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 재심 인용판정에 대하여 부당해고구제재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대전지방법원           )를 제기하여 인용 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해 피고들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대전고등법원           )은 피고들의



## 01 의뢰인이 마주한 문제

의뢰인 회사는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이 인용되자 해고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회사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나왔고, 항소심에서도 그 결과가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판정이 취소되었다고 이미 지급한 돈이 저절로 회사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앞선 행정소송 결과를 토대로 반환을 구할 금액을 산정하고 별도의 민사 청구를 진행하는 후속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 02 지급 원인이 사라진 돈과 다른 정산금을 구분하다

이 사건에서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게 된 근거인 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취소된 점이 중요했습니다. 반환 청구를 위해 실제 지급액 중 해당 임금상당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함께 지급된 해고예고수당은 구분하여 제외했습니다.

상대방은 임금과 퇴직금 관련 정산할 부분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판결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추상적인 미정산 주장과 이번에 반환해야 할 금액을 나누어 보는 사건이었습니다.

### 대응의 핵심

확정된 재심판정 취소와 실제 임금상당액 지급 내역을 연결했습니다.

**당신이 키운 사업입니다. 분쟁 앞에서 쉽게 내주지 마십시오.**

**해고 분쟁 중 지급한 돈. 해율은 임금상당액 약 3,781만 원의 반환 판결을 받았습니다.**

- 노무 분쟁이 끝나도 회사의 비용 정산이 남았다면?
- 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 행정소송 승소 이후 회사 자금을 돌려받고 싶다면?

**결과를 만들어낸 해율에 맡기십시오.**

**이제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



### 03 법무법인 해율의 대응

법무법인 해율은 회사를 대리하여 지급된 임금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노동위원회 판정에서 행정소송과 항소심을 거쳐 판결이 확정된 경과를 지급 원인과 연결하고, 상대방별로 반환 대상 원금을 특정했습니다.

법원은 재심판정의 취소가 확정된 이상 해당 임금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의 시작 시점은 원고가 구한 날짜와 달리 정했지만, 반환 대상 원금은 모두 인정했습니다.

### 04 판결 결과와 의미

법원은 두 상대방에게 각각 17,528,470원과 20,283,960원, 합계 **37,812,43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 일부를 제외한 원금 전액이 인용되었고 소송비용은 상대방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해고 분쟁에서 유리한 행정판결을 받은 뒤 금전 반환 문제까지 이어서 해결한 결과입니다. 앞선 소송에서 이겼더라도 이미 지급한 비용과 후속 청구를 따로 정리해야 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결과의 핵심

반환 대상 원금 약 3,781만 원 전액을 인정받았습니다.

잘할 수 있다는 변호사는 많습니다.

**해율은 이미 해낸 결과로 답합니다.**

**해고 분쟁 중 지급한 돈. 해율은 임금상당액 약 3,781만 원의 반환 판결을 받았습니다.**

- 전 직원과 임금·퇴직금 정산을 계속 다투고 있다면?
- 인사 사건의 여러 절차를 연결해 검토해야 한다면?
- 승소 판결 뒤 필요한 후속 민사 대응을 정하고 싶다면?

**결과를 만들어낸 해율에 맡기십시오.**

**이제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